



인쇄인 사기 떨어뜨리는 한국도로공사의 편법적 제 식구 챙기기 도성회와 5년간 308건 인쇄 수의 계약 계약금지규정에도 10건 위반

불황을 넘어 생존의 문제에까지 치달은 인쇄업계는 그야말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쇄인의 의지를 꺾는 일이 또다시 발생해 인쇄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전직 임직원의 친목단체인 도성회에 5년간 인쇄수의계약 308건을 편법적으로 몰아준 것이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지난 9월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전직 임직원들의 친목단체인 사단법인 도성회에 대한 특혜 제공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인쇄계약 509건 가운데 60.5%에 달하는 308건을 도성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사태 등으로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지난 2014년 8월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10건의 소액 인쇄계약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공성·투명성 배제한 채 도성회와 인쇄수의계약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현직 임직원이 사단법인 도성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해 각종 사업에 관

여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5년(2010~2014년)동안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인쇄계약 총 509건(총 계약금액 30억3700만원)의 60.5%에 달하는 308건을 사단법인 도성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액은 19억9500만원이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으로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이 금지된 2014년 8월 26일 이후에도 10건의 소액 인쇄수의계약(금액 3400만원)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관 변경을 허가하거나 매년 사업계획 및 실적을 제출받는 등 사단법인 도성회의 사무를 검사·감독하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사단법인 도성회와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인쇄계약을 수의하거나 사단법인 도

성회에서 전액 출자한 주식회사 △△와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계약을 맺고 있어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도 '사단법인 도성회 정관'에 한국도로공사 현직 임직원을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도성회가 전액 출자한 △△업체와 편법적으로 8개 휴게소와 4개 주유소 등 총 12개의 휴게시설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고속도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업체의 실적 등 입찰 조건 등을 과도하게 제한했고, 그 결과 2009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특정 업체가 전체 용역의 76.7%를 수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도성회 및 그 출자회사와 인쇄계약 및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공사 현직 임직원이 도성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도성회를 검사·감독할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사단법인 도성회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에서 도성회 및 그 출자회사인 주식회사 △△와 체결하는 인쇄계약 및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표명했다.

법 위반하면서 일상적인 인쇄물 밀어주기 계속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소액 계약의 경우 계약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성 확보 등을 감안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한국도로공사와 도성회가 인쇄계약한 내용을 보면 주로 구내전화번호표, 명함(47건, 2억8300만원), 홍보용 종이가방(6건, 1억100만원), 업무백서(10건, 1억800만원), 홍보물 리플릿(29건, 1억6000만원) 등 일상적인 인쇄물로서 특별히 전문성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인쇄물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쇄사를 배제하고 도성회와 장기간 편중되게 수의계약하는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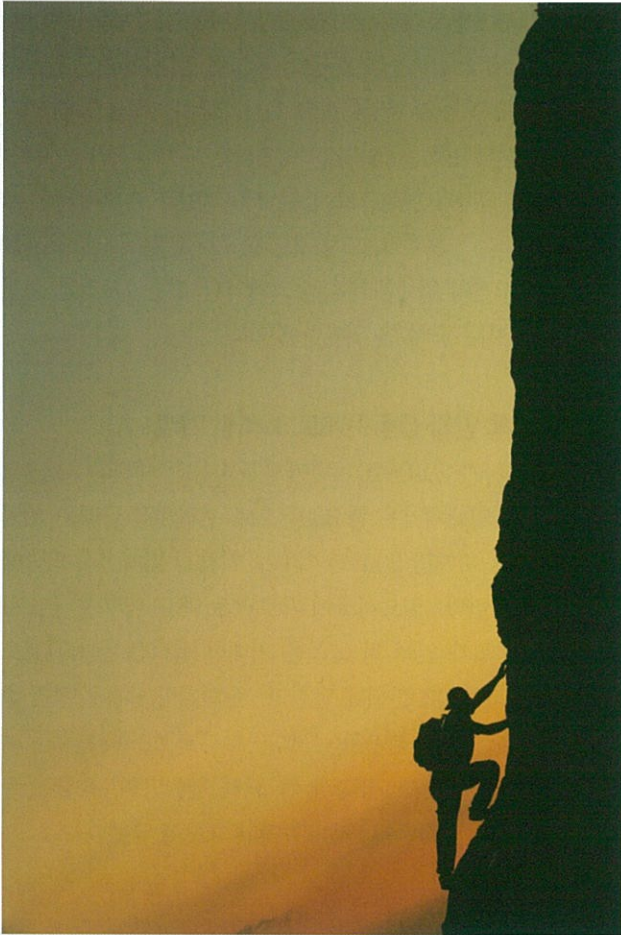
또한 2014년 8월 26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8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계약이라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해당 공기업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도성회와 10건의 인쇄계약을 수의계약한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2008년 이후 인쇄·물품구매로 35억원 거래

한국도로공사가 2010~2014년까지 5년 동안 체결한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인쇄계약은 총 308건으로 수의계약 금액은 19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2008년 이후로 기간을 넓히면 수의금액은 크게 증가한다. 일요서울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한국도로공사와 도성회가 인쇄 및 물품을 거래한 실적은 총 604건으로 금액은 35억9020만원에 달한다. 수의계약 구매물량은 총 598건으로 약 35억7천만원 규모다. 부분별로 거래현황을 보면 출력물 인쇄거래가 545건에 약 34억4천여만원, 표창장 등 각종 물품구매가 59건에 1억4537만원 규모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문성·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인쇄물도 도성회와 장기간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인쇄업은 전체 사업체의 90% 이상이 영세사업체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쇄물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폐업하는 인쇄사도 속출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도성회 관련 국회의원 질타 이어져

지난 9월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계속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도공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인쇄계약 509건 중 60.5%인 308건을 도성회와 수의계약 맺었다. 계약금액만 19억 9500만원으로 수의계약은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도성회에 장기간 일감을 몰아준 것은 도로공사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라며 “심지어 도성회 정관에 따르면 도로공사 현직자도 준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역시 “도성회 회원 전원을 탈퇴시키고 인쇄사를 폐업했다고 하지만 가열찬 혁신이 필요하다”며 “평상시 일상감사, 사전 예방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저서 ‘철밥통 공기업’을 김학송 도공 사장에게 선물로 가져왔다며 읽어보라고 권유했다. 한편 도공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도성회에 현직도 가입할 수 있는 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도공 사장 출신의 도성회...감사원 지적에도 정관 개정 안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됐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도성회 구성은 10명의 직원과 전국에 7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22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성회의 대표는 한국도로공사 사장 출신이 주로 역임하고 있다.

도성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자격은 한국도로공사에 임원 및 3년 이상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직원은 정회원, 도로공사 및 도성회 사업취지에 호응하여 입회한 자나 법인들은 특별회원으로 대우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성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돼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는 명예회원 자격을 주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직 임직원이 도성회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것인데,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체회원 2231명의 79%에 달하는 1766명이 한국도로공사에 현재 재직중인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같은 해 11월 준회원으로 가입한 현직 임원 1766명을 일괄 탈퇴처리했으나 정관은 여전히 변경되지 않은 상태다.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직원이 준회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처럼 현직 임직원이 도성회에 가입할 경우 각종 특혜를 몰아줄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성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정한 것 외에도 출판 및 인쇄업, 고속도로 건설 유지관리 부대시설에 대한 기술 및 운영개선에 따르는 연구자문, 고속도로 유지관리부문의 기술혁신 또는 제도개선에 부응하는 용역사업, 고속도로 편의시설 운영 개선에 기여하는 관련사업 운영, 고속도로 광고시설물 이용 건전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사업, 기타 상기 각항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과 도성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열악한 인쇄산업...사업체·종사자 3년 연속 감소

인쇄업계는 2010년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사업체 수는 물론이고 종사자수도 동반하락하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생사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10인 이상 인쇄 및 관련업체 사업체수는 1153개사로 2010년(1342개사) 대비 189개사(-14.0%) 감소했다.

경인쇄업, 스크린인쇄업, 기타인쇄업이 포함된 ‘인쇄업’ 2013년 사업체수는 839개사로 2010년(983개사) 대비 144개사(-14.6%) 감소했다. 특히 오프셋 인쇄가 포함돼 있는 ‘기타인쇄업’ 2013년 사업체수는 522개사로 2010년(605개사) 대비 83개사(-13.7%), ‘경인쇄업’ 2013년 사업체수는 152

〈표1〉 최근 4년간 인쇄 사업체수 현황(10인 이상)

(단위: 개사,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0-2013년	
		업체수	증감률	업체수	증감률	업체수	증감률	업체수	증감률	업체수	증감률
인쇄업	경인쇄업	198	-3.5	191	-7.9	176	-13.6	152	-23.2	-46	-23.2
	스크린인쇄업	180	-8.9	164	0	164	-0.6	165	-8.3	-15	-8.3
	기타인쇄업	605	-0.8	600	-5.2	569	-8.3	522	-13.7	-83	-13.7
인쇄업 합계		983	-2.8	955	-4.8	909	-7.7	839	-14.6	-144	-14.6
인쇄관련산업	제판조합업	132	-28.0	95	-26.3	120	-15.8	101	-23.4	-31	-23.4
	제책업	181	-9.4	164	-0.6	163	-1.8	160	-11.6	-21	-11.6
	기타인쇄관련산업	46	-4.3	48	-2.1	49	-8.2	53	-15.2	7	-15.2
인쇄관련산업 합계		359	-14.5	307	-8.1	332	-5.4	314	-12.5	-45	-12.5
인쇄및관련산업 합계		1,342	-6.0	1,262	-1.7	1,241	-7.1	1,153	-14.0	-189	-14.0

〈표2〉 최근 4년간 인쇄업 종사자수 현황(10인 이상)

(단위: 명,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0-2013년	
		종사자수	증감률	종사자수	증감률	종사자수	증감률	종사자수	증감률	종사자수	증감률
인쇄업	경인쇄업	4,254	-3.1	4,121	-5.9	3,875	-1.7	3,810	-10.4	-444	-10.4
	스크린인쇄업	3,795	-10.5	3,395	-1.6	3,339	-3.4	3,227	-14.9	-568	-14.9
	기타인쇄업	14,446	-1.5	14,668	-12.9	12,768	-3.7	12,298	-14.8	-2,148	-14.8
인쇄업 합계		22,495	-1.3	22,184	-9.9	19,982	-3.2	19,335	-14.0	-3,160	-14.0
인쇄관련산업	제판조합업	3,078	-32.5	2,075	-41.1	2,929	-15.2	2,484	-19.2	-594	-19.2
	제책업	3,900	-11.7	4,359	-7.3	4,037	-0.6	3,930	-11.8	30	-0.7
	기타인쇄관련산업	964	-11.8	850	-4.4	812	-32.8	1,078	-11.8	114	-11.8
인쇄관련산업 합계		7,942	-8.2	7,284	-6.7	7,778	-3.7	7,492	-5.6	-450	-5.6
인쇄및관련산업 합계		30,437	-3.1	29,468	-5.7	27,760	-3.4	26,827	-11.8	-3,610	-11.8

개사로 2010년(198개사) 대비 46개사(-23.2%), ‘스크린인쇄업’ 2013년 사업체수는 165개사로 2010년(180개사) 대비 15개사(-8.3%)가 각각 감소했다.

종사자 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2013년 10인 이상 인쇄 및 관련업체 종사자수는 2만6827명으로 2010년(3만437명) 대비 3610명(-11.8%) 감소했다.

경인쇄업, 스크린인쇄업, 기타인쇄업이 포함된 ‘인쇄업’ 2013년 종사자수는 1만9335명으로 2010년(2만2495명) 대비 3160명(-14.0%) 감소했다. 특히 오프셋 인쇄가 포함돼 있는 ‘기타인쇄업’ 2013년 종사자수는 1만2298명으로 2010년(1만4446명) 대비 2148명(-14.8%), ‘경인쇄업’ 2013년 종사자수는 2013년 3810명으로 2010년(4254명) 대비 444명(-10.4%), ‘스크린인쇄업’ 종사자수는 2013년 3227명으로 2010년(3795명) 대비 568명(-14.9%) 각각 감소했다.

정부 공공기관 구조개혁 의지 비웃는 도공

인쇄업은 전체 사업체의 90% 이상이 영세사업체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쇄물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폐업하는 인쇄사도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인쇄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품종 소량생산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계속되고 있는 국내의 경기불황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정부기관·비영리단체의 인쇄업 침식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에 따라 인쇄인들은 수 차례에 걸쳐 정부기관·비영리단체의 인쇄업 침식 철폐를

정부에 건의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산하단체인 한국도로공사도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공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편법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더구나 2014년 8월 26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으로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성회와 인쇄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심 국정과제로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내세우며 공공기관의 비리와 방만한 경영을 척결하는 개혁작업에 들어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의 안하무인적 태도는 현 정부의 의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공정 거래를 위반한, 있을 수 없는 반경제적 처사다. ⊙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개최한 사회적책임 선도기업 선포식